

非수도권 의원들도 ‘지방 독소 조항’ 인지 못하고 찬성표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법안 국회 심사 과정 들여다보니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기반한 법안으로 지적된다.

이는 정부의 끼워넣기식 입법과 국회의 허술한 법안심사가 겹쳐지면서 벌어진 지방출대의 상징적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非)수도권 의원들은 지방도시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찬성표를 던져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고유의 입법권한을 내팽거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결합기 법안심사 비판여론=해당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통상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이라는 부분을 통해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문제의 조특법 개정안에 유턴기업(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수도권 복귀에 대한 세제혜택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담겨있는지, 다른 지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법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특법만 해도 개정항목이 7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인데다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상당부분을 차지해 ‘수도권 특혜’ 조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문제의식 결여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기재위가 지난해 12월 법안의 상임위 의결 직전에 받은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유턴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다.

70여 방대한 항목에 묻혀

‘수도권 특혜’ 내용 전혀 몰라

비판여론 고조…재개정 목소리

결국 비수도권 지역구의 기재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전문위원이 낸 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법안 심사에 임한 것이다.

국회 내 지역구 의원의 세력분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대 국회 전체 의원 가운데 수도권 의원 비율은 전체의 48.2%에 달해 역대 국회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각 상임위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은 모두 26명인데 수도권 14명, 비수도권 10명, 비례대표 2명으로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현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법안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임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다시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재개정’ 목소리 커져=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공동대표 박재율)는 9일 ‘국가균형발전 가로막는 수도권집중 정책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사실상 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가 혼란한 상황에서 밀어붙인 눈가림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시 법안을 논의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이 출석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 /연합뉴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재위원이긴 하지만, 조세소위가 아닌 예결소위에서 활동한 탓에 법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법안을 확인해서 재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갈수록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역 정치권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산일보=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블랙리스트 문건에 ‘K·B 동의’ 표기

국정원·청와대 의미 한 듯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

정부 비판적이거나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문건에 ‘B’와 ‘K’라는 알파벳이 있으며, 이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의미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중환 의원이 9일 주장했다.

도 의원이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별 검토 내용’ 내부 문건에는 ‘다 분야도 결과가 늦어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K’라고 돼 있다.

여기서 K는 ‘국정원’의 영문 표기 첫 글자와 일치하며,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하는 ‘B’가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도 의원이 정부의 문화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연극 연출가 고선웅 씨에 대한 문제부의 지원 관련 문건에 ‘K·B 동의, 1차관’이라는 표현이 있다.

도 의원은 “(문제부 1차관)이 사람이 만든 ‘조씨고하’라는 작품을 보니 너무 좋아서 직원에게 이런 걸 공연하자고 하니,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1차관)가 깜짝 놀라 ‘B’에 전화해 담당 비서관에게 ‘이 사람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비서관)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죠’라고 해서 ‘K’한테 전화해 ‘빼달라’고 했고, 그래서 양해를 하고 난 뒤에 리스트에서 빼졌

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이 차관이 옷을 벗는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청와대 정부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담당했던 비서관이 내려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적힌 문서를 봤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특정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동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정동춘 KS포츠재단 이사장은 9일 재단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노승일 재단 부장이 징계사유인 내부 문건 유출뿐 아니라 폭언·폭행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노 부장이) 10차례 가까이 폭언, 폭행,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1000일만에… 박대통령 ‘7시간 행적’ 답변서

오늘 현재에 상세 자료 제출

시간대별 내역·근거 자료 담길 듯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만에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현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10일 답변서를 내면 지난달 22일 현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만이 된다.

특히 이 답변서는 현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

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주말에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측은 “그날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서류검토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서류를 쌓아놓고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답변서는 박 대통령이 당일 아침 기상해 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1일 기자회견담화와 윤전주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현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

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오전 10시께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렀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의료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침부터 간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원 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오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것이 유력하다. 논란이 됐던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도 답변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다낭 · 캄보디아

문의: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 062)228-1199

캐주얼

ARPF01

초특가 필수기

앙코르왓 4일, 5일

5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1일 ~ 1월 14일 매주 수/토

스카이앙코르항공 (ZA항공)

특식4회(샤브샤브, 김치찜, 버섯김치전골, 쌈밥정식)

캐주얼

AVPF13

[4성급 호텔] 투본강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8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0일 ~ 1월 17일 (출발일 상이)

비엳펏항공 (VJ항공)

호이안 투본강 투어(\$30상당), 스넥바구니(\$10상당)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임장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창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